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04
----------	-------

발의연월일 : 2022. 5. 13.

발 의 자 : 박대수 · 지성호 · 양금희
임이자 · 김용판 · 이종성
김선교 · 안병길 · 조명희
김희곤 · 이주환 · 강기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

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과징금) ① (생 략) <신 설>	제5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u> <u>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u> <u>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u> <u>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u> <u>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u> <u>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u> <u>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u> <u>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u> <u>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u> <u>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u> <u>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u> <u>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④ <u>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u> <u>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u> <u>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u> <u>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u> <u>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u> <u>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u> <u>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u>	⑤ ----- ----- ----- <u>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u> ----- ----- ----- -----

<p>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p> <p>⑥ 제1항 및 제2항----- ----- ----- -----.</p>
--	--